

한미FTA 발효...

사료원가 달라질 것 없다

사료용 옥수수 등 관세 즉시

철폐됐지만

이미 16개 주요품목 할당관세

0% 적용

지난 3월 15일을 기해 한미 FTA가 발효됐지만 국내 사료업체에 달라진 건 없다. 그 이유는 이미 사료용 옥수수 등 주요 사료원료 1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로 인한 사료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무관세 16개 품목은 옥수수, 매니옥펠리트, 유장, 대두, 대두박, 주정박, 근채류, 면실, 귀리, 매니옥칩, 알팔파, 당밀, 밀기울, 면실박, 야자박, 팜박 등이다.

이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사료용 옥수수라든가 사료용 유장 등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지만 이미 할당관세 0%의 적용을 받아 발효전이나 후나 달라질 게 없는 것이다.

그러나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다음달중 사료가격 안정대책을 마련, FTA 시대에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축산신문 김영란 ysfeed@hanmail.net 2012.03.21

“질적성장·소비기반 확대 역점”

임의자조금, 의무자조금제로

전환 강조

새의자 / 마광하 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

“나날이 성장해가는 오리협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3월 21일 제6대 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으로 취임한 마광하 지회장은 “앞으로 3년 동안 도지회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오리협회 활성화와 오리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 이날 취임한 신임 마 지회장은 “오리산업은 지난 2006년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오리가 농림생산업종 7위를 차지할 정도로 보배로운 축종으로 성장했다”며 “그동안 오리산업이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왔는데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두터운 소비자층 기반확대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리가 기타 축종에 속해 있다가 종족의 개념이 지난 2008년도에야 법제화 되어서 오리를 연구하는 전문인력이 취약해 경쟁력이 있는 축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오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마 지회장은 “오리산업은 급성장해오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왔다”고 지

적하고 “앞으로 오리가 정부정책의 관심 축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회와 회원여러분의 단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 지회장은 또 “오리고기 유통물량의 80%는 요식업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는데 앞으로 마트와 할인점을 통해 가정 소비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의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축산신문 윤양한기자 2012.03.28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보다 많은 오리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하다.

축산신문 2012.04.02

집회·시위때 가축 동원 막는다 농식품부, 방역 차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착수

각종 집회나 시위 등에 가축 동원 금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2일 가축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도축, 거래 등 정상적인 가축의 이동을 제외한 집회, 시위 등에 가축 동원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 동원 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 각종 집회, 시위 현장에 가축을 동원하고 있어 방역상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데다 특히 전국 단위의 축산농가들이 참석하고 FMD 등 전염병에 걸려 있는 가축이 동원될 경우 전국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각종 집회나 시위 등에 가축을 동원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중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축산신문 김영란기자 ysteed@hanmail.net 2012.04.04

오리산업 시설 현대화 위한 정책적 배려 절실



한국오리협회 정정우
사육분과위원장·부회장

정부는 FTA시대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시설현대화가 필요한 농가들은 그림의 떡이다.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특히 오리농가들은 더욱 그렇다.

가장 늦게 산업화가 되다보니 축산업 중에서도 가장 영세하고 축사시설이 낙후됐다. 하지만 오리농가들은 시설현대화는 남의 얘기로만 들린다.

오리산업은 최근 몇 년사이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산업의 근본인 오리농가들의 실정은 매우 어렵기만 하다.

오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오리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춰야만 한다. 때문에 축

[마켓 Now] 여름 보양식 오리, 3년 만에 가장 저렴

올해는 1년 내내 오리고기를 싼값에 맛볼 수 있을 것 같다. 초여름 대표 보양식인 오리고기가 최근 3년 사이에 가장 싼 가격을 기록 중이기 때문. 4월 들어 오리 산지가격(한마리 3kg 기준)은 평균 5889원으로 1년 전 1만233원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달만 해도 6200원 정도 했지만 4월에는 6000원 선마저 깨졌다.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산과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다.

오리고기 값이 떨어진 것은 단기간에 공급이 많아진 탓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측은 “2010년 조류인플루엔자(AI)로 어미 오리가 많이 죽어 작년 상반기에 오리 가격이 폭등했다”며 “이후 오리 농가들이 오리 사육을 집중적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실제 2011년 3~5월 오리가격은 1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하반기인 10월 이후 6000원 선으로 안정됐다.

수요 감소도 오리값을 떨어뜨렸다. 지난해 여름은 비 오는 날이 많아 보양식 수요가 기대치에 못 미쳤고, 불황으로 인해 외식을 줄이다 보니 주로 식당에서 먹는 오리고기 수요도 줄어들었다. 최근 한우와 닭고기 값이 싸진 데다 값이 치솟던 돼지고기도 정부가 일정 물량을 무관세로 수입하다 보니 가격이 안정됐다. 그러다 보니 오리고기를 찾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측은 “산지 가격이 오리 생산 원가(6000원) 이하로 떨어져 농가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오리는 초여름인 5월부터 본격적으로 소비되지만 공급량이 워낙 많아 가격은 올해 내내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남인기자 조선일보 2012.04.09

나눔축산운동본부 기부금단체로 지정 기재부, 관보에 공고...나눔 활성화 새전기

사단법인 나눔축산운동본부가 공식적으로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단체로 지정돼 ‘나눔축산운동’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 30일 나눔축산운동본부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관보에 사단법인 나눔축산운동본부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음을 공고(제 2012-70호)했다.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따라 오는 20일 농협본관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사)나눔축산운동본부 현판식과 인터넷 홈페이지 시연회, 회원가입 및 후원회비 납부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본격적인 나눔 행보에 시동을 거는 것이다.

나눔축산운동본부는 범 축산업계(단체 또는 기업)와 범 축산인을 회원으로 출연금이나 회비, 후원금을 모아 농촌지역의 어려운 경종농가와 소비자,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나눔축산운동본부가 올해 예상하고 있는 재원규

모는 약 12~15억원으로, 참여인원(단체)는 약 1만5천명 내외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단체회원은 농협중앙회와 농협계열사, 일선축협, 축산관련단체, 사료 및 유통가공업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으로, 개인회원은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및 축협의 임직원, 축산관련단체 및 업체의 임직원, 축산농가, 일반 후원회원 등이다.

축산신문 신정훈 jw313@hanmail.net 2012.04.09

[장보기의 달인] 알칼리성 식품, 오리고기

“돼지고기는 누가 사주면 먹고, 닭고기는 내 돈으로 먹고, 오리고기는 남이 먹고 있으면 뺏어서라도 먹어라”는 옛말이 있다. 오리고기가 우리 인체에 다양한 영양소 제공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겨난 말일 것이다. 특히 나쁜 봄철, 원기 회복을 위한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이 무렵에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오리고기는 육류 중에서 특이하게도 알칼리성 식품으로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다. 많은 양을 먹어도 체내의 지방 과다 축적에 의해 유발되는 동맥경화, 고혈압 등 성인병에 걸릴 염려가 없다. 오히려 인체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스테미너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또 오리고기는 동의보감, 본초강목 등의 옛 한의서에 고혈압과 신경통, 동맥경화 등 순환기 질환에 효과가 있으며, 비만증, 허약체질, 병후 회복, 음주 전후, 위장질환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 다른 육류에 비해 비

타민A가 월등히 많아 봄철 야외활동으로 인한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성 질환과 면역력 강화에 아주 효과적이며, 두뇌 성장과 기억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체력 소모가 많은 수험생과 운동,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에게도 효과적이며, 다량의 콜라겐 함유로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은 여성에게도 효과적인 식품이다. 특히 오리알은 오리고기보다도 불포화 지방산의 함유량이 높아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인 레시틴 함유량이 달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오리고기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오리고기의 판매량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오리 전문매장에는 숯불에 구운 훈제오리를 비롯하여 매콤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오리 불고기, 오리고기 고유의 식감과 고소함을 느낄 수 있는 생오리 등 각 가정에서 취향에 맞게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판매하고 있어 주부들의 일손도 덜어주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동아백화점 오리 전문 매장 이순분 사원은 “오리양념 불고기의 경우 고추와 양파, 대파 등을 첨가하여 취향에 맞게 즐기면 되고, 훈제오리의 경우 약한 불에 살짝 구워 먹으면 구수한 맛을 즐길 수 있다”며 “생오리의 경우 프라이팬 등에 구워 소금을 살짝 묻혀 부추, 깻잎, 상추 등과 먹으면 오리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매일신문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2012.04.1

오리업계 “군납물량 더 늘려야”

작년 월 1회→연 9회로
군인 1인당 공급량 축소
“수입고기 대체분 반영을”

오리업계가 군납 물량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오리고기는 지난 2008년 정식으로 군납 품목에 포함돼 월 150g이 공급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오리고기 군납 물량이 월 1회에서 연간 9회로 줄어 군인 1명이 하루에 3.7g이 공급되는 등 물량이 축소됐다. 소고기 등의 군납 물량이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이다.

올해 군 급식 축산물 기준량은 닭살코기와 한우가 각각 7g과 1g이 늘어나고 조각닭·계란·수입쇠고기는 각각 10g·5.81g·5g이 줄었다. 군인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은 닭고기·계란·한우·육우·수입쇠고기가 각각 62g·37g·13g·9.41g·9g이며, 돼지고기·우유·삼계탕·오리고기는 62.93g·250ml·4.1g·3.7g으로 지난해와 같다.

오리업계는 군납 물량이 타 축종에 비해 적은데다 오리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군납 물량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군납 물량 확대가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오리고기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촉진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현 오리협회 전무는 “국내 축산물의 군납 물량을 줄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입고기로 대체된 부분에 한해서 오리 군납 물량을 늘려달라는 것”이라며 “물량이 확대되면 최근 생산비 이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리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라고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2012.04.16

오리업계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 중
늘어난 생산량·재고 소진 위해
덤핑판매 성행
오리가격 생산비도 못미쳐…
“입식 감축방안 마련돼야”

오리업계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 중이다. 최근 오리업계가 늘어난 생산량과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생산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덤핑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생체오리가격이 생산비 6천300원(생체 3kg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4천700원대로 전주 대비 15%가 하락했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7천원대였던 신선육이 6천200원으로 12%가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8%와 42%가 폭락한 것이다. 이처럼 오리가격이 폭락한 것은 근본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지만 F1오리가 여전히 생산에 가담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도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끼오리 입식량과 도압물량을 살펴보면 금년 1월과 2월의 입식물량은 532만8천수와 680만6천수로 전년 동기 대비 20%, 80%가 늘어났다. 또 도압물량 역시 538만750수와 566만3천277수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3%와 27.1%가 늘어났다. 더욱이 비수기인 2월에 월 도압실적이 500만수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며 2009년에

비해서는 2배가 넘는 숫자다.

특히 3월 도압실적을 보면 입이 벌어질 지경이다. 무려 754만2천375수가 도압된 것.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2%가량이 늘어났다. 3월 중 도압실적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처럼 도압마리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오리업계 스스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오리계열업체 관계자는 현재 도압물량과 소비를 비교하면 월 100만수 이상이 과잉 생산되고 있다며 이를 소진하기 위해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거래처에 덤핑으로 물량을 밀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도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오리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오리훈제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오리고기 소비가 최근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흡소핑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오리고기 소비량이 30%이상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오리업계는 불황타개를 위해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리계열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불황의 근본원인은 무엇보다 공급과잉에 따른 것이며 가격이 아무리 하락해도 소비자가격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계 자율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씩 입식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리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새끼오리 입식 감축 방안을 마련하면 이를 적극 협조해 나갈 것 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축산신문 이희영기자 Lhyoung@chuksannews.co.kr 2012.04.16

축산발전 위한 무한열정...

국정 활동 기대

19대 국회의원 당선, 축산관련 영광의 얼굴

새누리 10명 · 민주통합 3명 · 무소속 1명... 김명연 · 안덕수 당선자 첫 입성

축산업계는 4·11 총선 결과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18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활동했거나 그동안 축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아끼지 않은 당선자는 누가 있는지 살펴본다.

◆새누리당

- 강석호 당선자(경북 영양 · 영덕 · 봉화 · 울진) 55년생. 외국어대 스페인과. 18대 국회 농식품위 새나라당 간사. 재선
- 김명연 당선자(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64년생. 건국대 축산대 사료학과, 초선
- 김학용 당선자(경기 안성) 61년생. 중앙대 경제학과. 18대 국회 농식품위 위원. 재선
- 신성범 당선자(경남 산청 · 함양 · 거창) 63년생. 서울대 인류학과. 18대 국회 농식품위 위원. 재선
- 안덕수 당선자(인천 강화서구을) 46년생. 고려대 경영학과. 농림부 차관보 역임. 민선 강화군수 역임. 초선
- 여상규 당선자(경남 사천 · 경남 · 하동) 48년생. 서울대 법학과. 18대 국회 농식품위 위원. 재선

- 유정복 당선자(경기 김포)
57년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농림수산물부 장관 역임. 3선
- 이학재 당선자(인천 서구강화군갑)
64년생. 서울대 축산학과. 민선 인천서구청장 역임. 재선
- 황영철 당선자(강원 홍천·횡성)
65년생. 서울대 정치학과. 18대 국회 농식품위 위원. 재선
- 홍문표 당선자(충남 홍성·예산)
47년생. 건국대 농화학과. 한국농어촌공사장 역임. 재선

◆민주통합당

- 김우남 당선자(제주시을)
55년생. 제주대 경영학과. 18대 국회 농식품위 민주통합당 간사. 3선
- 김영록 당선자(전남 해남·완도·진도)
55년생. 건국대 행정학과. 18대 국회 농식품위 위원. 재선
- 이낙연 당선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52년생. 서울대 법학과. 18대 국회 농식품위원장(전반기). 4선

◆무소속

- 유성엽 당선자(전북 정읍)
60년생. 서울대 외교학과. 18대 국회 농식품위(전반기)위원. 재선

축산신문 편집부 2012.04.16

전남도, 올해 녹색축산육성기금
193억원 지원
지난해比 100억원 증가...금리
1%로 낮추고 대출 조건도 완화

전남도는 친환경축산 실천을 위해 올해 녹색축산육성기금을 지난해 보다 100억원이 늘어난 193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이달 중순부터 용자지원을 시작한다.

특히 용자 조건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의 건전한 육성 및 확산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이율을 2%에서 1%로 낮췄다. 시설자금의 상환 조건도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완화해 한미 FTA 발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기로 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용자 지원사업 대상자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3월 말 최종 선정됐으며 지원 규모는 시설자금이 159농가에 168억원이고 운영자금이 17농가에 25억원이다.

지원 분야별로는 친환경 축사시설에 30호 73억원, 가공·유통·판매사업분야에 18호 73억원, 가축 운동장 확보사업에 40호 20억원, 동물복지 시범농장사업에 3호 3억원,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74호 8억원, 축분급속발효기사업에 11호 16억원 등 총 176호에 193억원이다.

시설자금 용자 한도는 축산농가 2억 ~ 5억원, 법인 8억원, 유통·판매업체는 10억원 이내다. 운영자금 용자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유통업체 3억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를 제정, 지난해까지 320

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오는 2018년까지 1천억원(도비30%·시군비 70%)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윤양한기자 2012.04.16

AI 재발 위험지역 집중관리 충남·북 6곳 상시예찰 대상

충청권에서 모두 6곳이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 위험이 높은 집중관리지역으로 관리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해마다 AI 재발 위험이 높은 집중관리지역 36개 시·군을 선정, AI 상시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관리 지역은 울산 1곳, 경기 10곳, 강원 1곳, 충북 3곳, 충남 3곳, 전북 5곳, 전남 8곳, 경북 4곳, 경남 1곳 등이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한 국경검역, 야생조류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중앙기동 점검반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AI 발생 시 지자체와 방역기관 등의 초동 대응능력을 기르는 AI 가상방역훈련(CPX)도 실시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닭,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실태점검에서 방역조치를 위반한 48개 농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독시설 미설치(23곳), 발판소독족 미비치(14곳),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9곳) 등이다.

적발된 농가의 농장주는 최근 2년 간 위반횟수에 따라 50만 ~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가소독 등 차단방역이 소홀한 상황”이라며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이달 끝나지만 이후에도 AI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201.04.17

오리 사양관리 봄철에 더욱 관심이 필요

온도와 습도 관리는 기본

오리의 경우 봄철에는 날씨의 변화 및 일교차가 커서 환경 스트레스를 받기 쉬우며, 잦은 기온 변화나 건조한 공기로 인해 질병 발생률이 높아진다. 오리가 어릴수록 안정적인 온도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초기성장을 저해하여 향후 생산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깃털이 완전히 자라는 28일령 이후에는 기온이 5℃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추가 난방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그 이전의 어린 오리들은 반드시 일령별 적정온도를 유지해줘야 하며,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밤과 새벽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오리사 내 온도는 오리의 등높이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적정온도의 판정은 측정온도 뿐 아니라 오리의 상태, 활력, 분포 상태 등을 자세히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온도와 함께 습도 관리도 사계절 모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특히 건조한 봄철에 관심

을 기을일 필요가 있다. 봄에 입추를 했을 경우 3 일령까지는 실내가 건조하지 않도록 특히 신경 쓰고, 4일령 이후에는 음수량 및 배설량의 증가, 급수기의 넘치는 물 등으로 인해 습도가 증가하므로 과습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적절한 환기로 깨끗한 공기를

분뇨가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는 호흡기를 손상시켜 질병을 유발한다. 또한 난방을 위해 열풍기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농도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밀폐형 오리사의 경우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 환기는 오리사 내 유해가스 및 먼지를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공기중과 깔짚의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다. 환기를 하면 오리사 내의 공기가 빠져나가고 낮은 온도의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데 내부의 따뜻한 공기와 섞이면서 습이 생기게 된다. 봄은 겨울만큼 내·외부 온도차가 크지 않아 환기시에 생기는 습이 적으므로 병아리가 어릴 시에는 추가적인 가습이 필요하기도 하다. 따뜻한 낮에는 창을 개방하여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고 밤에는 해가 지기 전에 창을 닫아 급격한 온도 변화가 없도록 환기와 온도에 모두 신경 써주어야 한다.

면역력을 유지하며 여름에 대비해야

환절기와 봄철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이다. 오리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바이러스성 장염의 예방을 위해서 백신 접종 등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사양관리를 통한 면역력 유지가 기본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또한 미생물제, 유기산제 등 적절한 사료첨가제의 사용은 오리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점점 짧아지는 봄에 이어 금세 다가오는 여름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급이기 등 오리사 시설 내 곰팡이 등이 생기지 않도록 청결히 유지한다. 오리는 마이코톡신(곰팡이독소)에 닭보다 훨씬 더 민감하다. 오염된 사료 등을 통해 곰팡이 독소에 노출될 경우 성장저해, 폐사율 증가로 역시 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주의하도록 하고, 장마와 혹서기에 대비한 오리사 시설과 주변 환경을 미리 점검, 보수하도록 한다.

오리산업 현황에 관한 한 논문에 의하면 사료효율은 가장 낮고 폐사율이 가장 높은 계절이 봄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사양 관리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축산과학원 김지혁 연구사
농업인신문 김지혁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사 2012.04.13

축분뇨 처리 통합관리 민간기구 만든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지원센터’ 설립 확정...위원회 구성·법 개정 착수 기타공공기관으로 출발

가축분뇨 처리 선진화를 위한 민간관리기구인 ‘축산환경지원센터’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환경지원센터를 기타 공공기관(정원 50명 이하)으로 출발시켜 단계적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분뇨처리, 악취제거, 환경오염 방지 등 질병

과 분뇨처리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총체적인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공공성을 가진 전문 조직에 의한 종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축산환경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축산환경지원센터'의 조직은 36명(임원 12, 직원 24)으로 시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나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어촌여향협회와 같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출발하게 된다.

앞으로 '축산환경지원센터'에서는 △가축분뇨처리 및 이용정보의 통합 관리를 비롯한 △퇴비·액비의 품질관리 △퇴비·액비의 유통활성화 △가축분뇨 처리 시설 및 처리기술 평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대상자 및 공법 선정 △가축분뇨 업무관련 담당자 교육 △가축분뇨 퇴비·액비 생산설비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축산환경자원화 협의체, 관계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법인 설립 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환경지원센터' 설립 근거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김영란기자 ysteed@hanmail.net 2012.04.23

특단의 소비홍보...공동 마케팅 필요 지상중계 / 하반기 축산물 가격 폭락 전망... 선제적 대책은

올 하반기에 모든 축산물 가격이 폭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을 지적, 선제적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바 있다.(2596호 1면톱) 문제는 선제적 대책이 무엇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계 전문가를 통해 축종별 선제적 대책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지상공청으로 엮었다.



정민국 실장 정규성 소장 박중수 교수 문성실 원장 오정길 조임장 정형연 대표 김만섭 대표 문정진 부회장

◆종합

▲정민국 실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축산물생산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도 있지만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하반기 축산물 가격 하락은 어느 한 축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축산물 전체가 맞물려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축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각 단체들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한우 사육두수 조절을 위해 암소 10만두를 도태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돼지 출하가 가장 많은 10월달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도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돼지도 마찬가지로 사육두수 회복속도가 너무 빨라 가을 이후에는 FMD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다. 때문에 능력이 떨어지는 모돈의 조기 도태 등을 통해 물량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닭고기와 오리고기 역시 계열업체들이 몸집 늘리기에 치중하면서 물량 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한우, 양돈, 닭고기, 오리고기 등은 모두 대체관계에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자조금을 통한 품목 홍보는 결국 시장 뺏기 밖에 안되기 때문에 국내산 축산물 소비홍보 공동 마케팅이 필요하다.

◆오리

▲ 김만섭 대표(모란식품)=최근 생산량 증가로 인해 오리값이 크게 하락했다. 생산량이 증가한 것도 가격 하락의 한 요인이지만 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이 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이는 단순히 오리고기 한 품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 축산물 소비가 연쇄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물가안정 차원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막대한 물량이 국내 시장에 풀렸다. 소비자들

은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고기’로 인식하고 있다. 오리고기가 없으면 돼지고기를 먹으면된다. 때문에 어느 한쪽이 과잉되거나 부족할 경우 타 육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한우값 하락으로 인해 대대적인 한우고기 할인행사로 인해 타 육류 소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육류소비 경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축산물 수급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류수요예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국내 육류 생산량은 얼마로 할 것인가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따른 사육시설과 도축장, 가공장 등의 허가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요예측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육류생산쿼터제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축산신문 2012.04.23

불투명한 배합 사료 유통구조 · 농장 따라 소득따라 사료가격 가지각색
농축유통신문 제안 사료 생산비 절감
책엔 동의 시행 쉽지 않을 것 전망

축산 인프라 공공화 통한 농가 경쟁력 제고 가능할까?
농협 계통 사료 구조개선 먼저 실시해야

축산농 보호관점서 제도 도입 검토해야
‘대형패커’ 성공 · 실패 의견 엇갈려
농가 · 기업 산업진출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

축산분야 농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료가격이 낮아지는 일과 어떻게 하면 좀더 비싼값에 생산한 가축과 원유 계란 등을 판매하느냐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농가들의 생각처럼 사료가격도 축산물 가격도 조절할 수 없는것이 현재 우리 축산업계의 현실이다. 이에 농축유통신문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료생산비 절감대책과 축산물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축장 구조조정문제 그리고 대기업의 축산진출과 관련해 축산단체 대표자들과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농축유통신문이 제안한 사료생산비 절감 대책과 관련해 공감하면서 먼저 농협계통사료가 모범을 보이는 부분과 시행하기 쉬운 과제부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의 사육부분 진출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원칙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다음은 4월 17일 오후 3시 제1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좌담회를 지상중계 형식으로 재구성해 보도한다. <편집자주>

일시 : 2012년 4월 17일

장소 : 제1축산회관 회의실

좌장 : 김재민(본지 편집국장)

사진 : 김수용 기자

기록·정리 : 황지혜 기자



전국농우협회 임관빈 부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재식 부회장

대한양돈협회 이동재 부회장

대한양돈협회 황신환 강우이서

한국조식협회 이상현 연구

농축유통신문 김재민 국장

정부의 사료대책에 대한 각단체의 입장

▲김재민 국장(농축유통신문)=배합사료 문제는

정부의 물가안정대책과 맞물려 농가들을 고통 받게 하는데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5월 중으로 사료가격 연동제 등 사료가격 안정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고 연초에는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으로 배합사료 관련 세제혜택과 원료구입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이 총선을 겨냥해 발표한 사료안정기금 설치 공약 등 정부와 정치권의 사료가격 안정대책에 대한 각 단체들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관빈 부회장(전국한우협회)=이번 사료안정기금 도입에 대해 정치권이 도입을 공약한 것에 대해 먼저 환영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발표한 사료대책의 경우 농가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료가격 안정대책이 실제 사료가격 인하로 이어져 농가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라면 좋을 것 같다.

현재 배합사료의 거품은 상당하다. 일례로 같은 회사 사료가 같은 지역에서 조차 판매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천 지역의 한우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톤당 최고 4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사료 한포에 1만원이라 했을 때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료에 거품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농협계통사료의 경우도 회원축협에 여러 형태의 수수료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결국 그 수수료와 장려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겠는가. 바로 농가들의 사료대금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고치는 것부터가 사료가격의 거품을 빼내는 일일 것이다.

▲김태섭 부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현재 축산업계는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리 낙농업계도 지난해 원유가격 인상투쟁에서 성과를 얻지 못했다면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것이다. 사료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본다. 농축유통신문에서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니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영 합리화와 유통혁신 등 사료가공과 유통과정 중 불필요한 비용들을 절감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깊이 공감 한다. 사료가격안정대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는 정부일 것이다. 07년과 08년의 경우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지금 낙농의 경우 정말 많은 농가들이 사육을 포기했을 것이다. 정부가 의지를 갖는 것이 지금으로써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본다.

▲이흥재 부회장(대한양계협회)=사료에 대해서 타 축종에 비해 양계 특히, 우리 육계사육 농가들은 무감각한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육계농가들도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어왔다. 일단 양계는 어떤 축종보다 사료품질에 민감한데 계열주체들이 사료가격이 높아지면 질이 떨어지는 원료를 사용한다던가 농가에게 돌아갈 사육수수료를 교묘한 방법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어온 것이 사실이다.

앞에 김재민 국장이 사료업계에 만연돼있는 거품을 제거했을 경우를 말했는데 그런 시스템을 계속 갈 경우 문제는 없을지가 의문이다. 사료가격의 대부분이 수입되는 원자재에서 기인하는데 거품을 제거한 이후 사료곡물가격이 폭등하면 무용지물이 아니겠는가.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기는 쉽지 않으리라 본다. 특히 농협이 먼저 모범적으로 나서야 일반 사기업들을

견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정선현 전무(대한한돈협회)=일본의 양돈업계 대표들이 최근 우리나라를 찾았다. 이유인즉 우리의 농축산부분이 일본과 상황이 비슷한데 축산선진국인 미국, 유럽과 FTA를 체결하는 모습을 보며 농축산부분에 어떤 안전대책을 만들었는지 알아보려고 왔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축산업계에는 농가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해 사료안정기금덕분에 우리 사료가격이 15% 이상 급등했는데 일본은 6% 대 인상에 그쳤다. 현재 일본은 사료안정기금제도를 도입해 갑작스러운 생산비 상승에 대한 완충작용을 통해 농가를 보호하고 있고 수입 농산물 가격이 적정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관세를 추가로 물려 수입농산물의 갑작스러운 유입으로 올 수 있는 농가피해를 막고 있다.

여기에 생산비 이하로 축산물 가격이 내려갔을 때 생산비 차액을 보전 해 주는 등 이중 삼중의 농가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FTA를 하면서 아무런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현 정부에선 그 중 하나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을 계속 요구했지만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

▲이강현 전무(한국오리협회)=오리는 계열화가 돼 있다 보니까 육계부분과 입장이 비슷하다. 오리는 사료를 계열주체가 선택해 공급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생산비에서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기 때문에 다른 축종과 다를 바 없이 사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는 마찬가지다. 계열화가 됐다 하지만 결국 사료비 부담은 농가와 계열주체가 함께 지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고 계열주체가 사료비 부담으로 사육규모를 제한할 경우 결국

농가들에게 2차 피해가 돌아 갈수밖에 없다.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원가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거품을 제거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우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고 여러 가격 인하방안을 마련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축산진출 어떻게 볼 것인가?

▲김재민 국장=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고자 한다. 최근 토종닭농가들과 사조와의 갈등이 심상치 않고 하림 등과 양계농가와의 갈등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갈등은 생산부분에 대기업들이 진출하기 때문인데 하림그룹은 닭위탁사육, 오리위탁사육, 돼지위탁사육에 이어 육우위탁사육까지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영역에 자본으로 무장한 기업들이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지바이오시스템이 자회사를 통해 직영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고 하림그룹도 계열사인 팜스코나 선진 등을 통해 양돈장 십여곳을 운영하고 있다. 뒤늦게 축산부분에 뛰어들든 사조도 제일먼저 양돈장 2곳을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의 생산부분 진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2008년 하림의 양돈업 진출 그리고 논산에 직영농장 건설 등의 경우 한돈협회가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 잠잠해진 것 같기도 하다. 기업의 축산생산부분 진출과 관련해 각 단체의 입장을 듣고 싶다.

▲이홍재 부회장=현재는 계열화하면 하림식의 수직계열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 협동조합형 패커나 수평계열화가 이야기 되고 있다. 하

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직이든 수평이든 의미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결국 농가는 계열화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종속되고 계열주체의 강한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육계부분은 이미 6~7년 전에 계열주체가 산업의 주도세력으로 자리를 굳히면서 모든 정책이 계열주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조만간 하림, 이지바이오, 사조에 의해서 어떤 형태의 계열화가 됐던 간에 축산업에서 일정부분 이상 거대 자본이 산업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농가는 종속되고 말 것이다.

▲정선현 전무=김국장의 잠잠하다는 이야기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2008년 양돈협회는 하림이 양돈계열화업체인 (주)선진과 (주)팜스코를 잇따라 인수하고 논산 봉동에 대형직영양돈장 건설계획이 발표됐을때 강한 반대 투쟁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양돈협회는 하림이 우리 양돈업을 육계와 같이 종속시키려 한다는 강한 위기감이 작용했었고 결국 하림의 이문연 사장, 김홍국 회장과 잇따라 접촉을 갖고 절충안을 모색했다.

그 방법이 양돈계열화사업의 경우 선진의 창업주와 같이 양돈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유지하는 것과 직영농장의 경우 종축분야 그리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시범농장 수준을 요구했다. 이 조건에 하림 김홍국 회장이 수용했기 때문에 하림의 양돈업 반대 투쟁은 끝을 맺을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우리 협회도 대기업이 거대 자본을 앞세워 생산부분에 진출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다만 양돈협회가 하림에 요구했던 것과 같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생산과 가공유통을 분담하며 상호 협력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본다.

▲이강현 전무=자본을 앞세운 기업들이 산업이 지금까지 성장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농가들과 중소기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열매를 아무런 양해없이 소유하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조산업이 오리부분에 진출하며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얼마 전 토종닭농가들의 사조산업에서의 집회도 그렇고 먼저 산업에서 농가들과 살을 맞대가며 산업을 일군 부분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기업윤리 같은 것들이 선행돼야 한다. 돈이면 모두 해결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동반성장 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한다. 대기업이 축산업에 진출하려면 기존 파이를 쪼개가는 방식이 아니라 신규투자를 통해 파이를 늘려가는 방식을 취해 주어야 한다.

▲김태섭 부회장=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기업이 축산에 진출하는 것에 일단은 반대 입장이다. 앞서 패널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 낙농업계는 서울우유라는 거대 협동조합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산업 진출에 대해 사실 둔감했다. 하지만 다시 살펴보니 대기업의 횡포가 우리 낙농업계에도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 낙농유가공업계에는 남양, 매일과 같은 기업에 농가들이 종속되어 있다.

이들 유업체가 아니면 생산한 원유를 납품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원유가 남게 될 경우 농가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쿼터삭감을 통보를 반복하고 있다. 서울우유의 경우 협동조합이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기업들과 거래하는 농가들은 이러한 불이익이 비일비재하다. 현재 이를 해소해 보겠다고 낙농진흥회도 만들고 집유체계 개편안도 수년째 논의를 하고 있다.

▲임관빈 부회장=우리한우농가들은 절대적으로 기업진출을 반대하고 있다. 한우는 80프로 이상이 부업으로 경종농업과 한우사육을 병행하는 복합영농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분들이 농업 그리고 축산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바닥에서 송아지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주셨기 때문에 전업화 된 한우농가들이 탄생하고 품질의 고급화도 이뤄낼 수 있었다. 하지만 기업들은 어떤가 수지가 맞지 않으면 결국 버리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영농을 하는 부업농가 그리고 이들로부터 송아지를 구입해 소를 키우는 전업농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지 기업형패커를 육성해 이들을 컨트롤하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본다.

도축장 구조조정과 대형패커 성공가능성은?

▲김재민 국장=정부가 도축장구조조정사업을 통해 70여개의 도축장을 절반 이하로 줄여나간다고 한다. 도축장 규모화와 시설현대화를 이루고 도축장 중심으로 대형패커를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정확한 의미는 결국 농가들이 도축장에 예속되거나 지금은 을의 입장인 도축장이 농가들에게 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도축사업에 미온적이었던 대기업들이 도축장 구조조정과 함께 도축장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축장 구조조정에 있어 농가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농가들이 도축장과 사료를 모두 아우르는 대형패커에 예속되고 말 것이라는 게 본지의 전망이다.

▲이강현 전무=우리는 오히려 현재로서 일부 도축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계열주체들이 도축장들을 다 갖고 있다. 이용도축을 일부하는 곳도 있지만 전남 나주 등 특정지역에 도축장이 몰려 있어 도축을 위해 먼곳을 이동하면서 많

은 물류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도축장과 관련된 문제는 오리 쪽보다는 돼지나 소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정선현 전무=미국식의 패커구조를 많이들 논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제가 부경양돈농협에 근무하던 시절 김해공판장을 250억 주고 지었다.

당시 사업은 권역별로 지금 말하는 패커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경남에 김해공판장, 김제에 목우축돈육가공공장, 군위LPC, 음성 한냉, 안성LPC 등 거점마다 최신설비의 도축장을 지었지만 농축협이 운영하는 LPC 이외에 모두 수많은 주인들이 바뀌었다.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는 200~300억원이면 충분하지만 이를 패커형태로 돼지를 매일 매입해 판매까지 하기에는 운영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농가와와는 당일 현금거래를 하고 생산된 돈육은 거래처와 30일 길게는 60일까지 외상거래를 하기 때문에 돈가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신용사업으로 적자분을 메워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식 패커는 우리나라 거래형태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 본다.

▲이홍재 부회장=저는 정 전무와 달리 기업중심의 대형패커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 본다. 이 대형패커사업이라는 게 뒤집어 말하면 계열화사업이다. 지금은 불투명해 보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성공하리라 본다. 계열화는 농가들을 조직화하고 여러 산업군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우리 축산업의 중심은 이미 기업으로 넘어가 있다. 아까 말했듯이 계열화사업이 수평이든 수직이든 의미가 없다 결국 계열주체가 산업의 중심으로 갈 것이라

생각된다.

▲김태섭 부회장=사실 거점 도축장 문제 등은 우리와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다만 낙농의 경우 노폐물 처리가 매우 힘들다. 노폐물은 경제수명이 다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긴급히 도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지역 공판장들이 출하예약제를 하다보니 쪼소의 도축이 쉽지 않아 상인들에게 헐값에 넘기고 있다. 이런 부분의 해소가 필요하다.

▲임관빈 부회장=지난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도드람공판장을 다녀 왔는데 도축과정을 제외하고 경매와 가공과정만을 보여줬다. 아직까지 오픈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했다. 수준이 많이 높아진 생산부분에 비해 도축장의 상황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판단하고 있다. 도축장 부분은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도축장 구조 조정과 시설현대화를 통해 도축부분에서의 손실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김재민 국장=오늘 좌담회에서 배합사료 시장의 구조 조정 방안 및 사료생산비 절감 방안, 유통 시장 개혁을 위한 축산인프라의 공공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농가와 기업이 대등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보려 했다. 배합사료 문제의 경우 거품을 걷어 낼 필요가 있다는 데는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이 모두 동의해 주신 것 같다.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사료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들의 소비자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본다. 농가들이 높은 사료가격과 낮은 축산물가격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배합사료업계도 지금까지의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도축장 문제의 경우 시간이 부족해 충분한 토론이 못된 것 같다.

다만 기업중심의 패커에 대한 경계심은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중심의 정책이 아닌 농업인 중심의 농정의 필요성 등을 언급해 주셨다. 본지에서는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큰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농가와 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마지막까지 토론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농축유통신문 김재민기자 jmkim@amnews.co.kr 2012.04.20

“AI 정밀검사 기능 수행...청정지역 유지” 충북축산위생연구소, 인플루엔자 검사실 준공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소장 신유호)가 지난 4월 20일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실 문을 열었다.

검사실을 갖춘 충북축

산위생연구소는 그동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의뢰해 실시하던 조류 인플루엔자 정밀검사를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충북축산위생연구소는 인플루엔자 검사실에서 상시예찰에 따른 연간 5만5천여 건의 검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실(204m²)은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총 10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달 28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생활안전 3등급 연구시설로 국가인증을 받았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운희 충북도 농정국장, 신관우 충북축산단체협의회장(충북낙협장), 박재철 양계협회 충북도지회장, 정기현 오리협회 충북도지회장, 유만영 충북가축위생방역본부 사무국장, 축산농가, 축산위생연구소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충북축산위생연구소는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실 가동으로 정밀검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 등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대해 직접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류 인플루엔자 신속진단으로 초동 방역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실은 차폐시설, 실험자보호, 병원균 유출방지 시설을 완비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9년 연속 AI 청정지역 유지로 충북지역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충북도 조운희 농정국장은 “첨단시설을 갖춘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실 준공을 계기로 충북 양축 농가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9년 연속 조류 인플루엔자 없는 청정 충북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충북 축산이 발전되고 소득 향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최종인기자 2012.04.25

[300자 발언대]

현실성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절실
마광하 지회장
〈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지회〉



2012년 1월 1일 이전 축산업 등록이 된 면적에 한해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017년까지 전 축종의 시설 현대화 지원

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수요자 입장에서 본 정책은 너무나도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현 시설에서도 무항생제 및 HACCP 인증까지 받아야 하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허가된 시설(건축물)이 아니면 정부 정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가설건축물신고와 축산폐수 준공을 내주며 관리를 해오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FTA라는 거대한 산을 모두가 동참해서 넘으려면, 정부에서 관리할 수준이라면 기존의 사업장에 미비한 곳을 개보수하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축산신문 2012. 4. 25

축산경영과장에 이상수씨,
식품산업정책과장에 노수현씨
농식품부 과장급 인사 단행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30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이상수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위기대응센터장(왼쪽)이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으로, 노수현 축산경영과장(오른쪽)은 식품산업정책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이상수 축산경영과장은 59년생으로 건국대에서 영양사료학을 전공했고, 공직에 발을 디딘 후 소신과 추진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과장은 64년생으로 서울대에서 축산학을 전공하고 기술고시에 합격, 농림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축산신문 김영란기자 2012. 5. 2